

협동조합, 지역 공동체 복원 구심점으로 키운다

정부, 'S.M.I.L.E' 전략 추진...재정·세제지원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출자한도 상향 등 내실 강화 전남, 1749개 '전국 4위' 규모...정책 수혜 등 기대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역 공동체의 핵심 경제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해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

협동조합 수가 전국 네 번째로 많은 전남 지역에서 정책 효과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홍근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년)'을 보

고하고 'S.M.I.L.E' 전략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경쟁력 강화(Scale up), 협력 확대(Mutual), 정체성 강화(Identity), 지역 참여 확대(Local), 운영 효율화(Efficiency)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이다. 창업 초기부터 도약·고도화 단계까지 컨설팅을 확대하고,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지역사랑

상품권 매출 기준 완화도 검토된다.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구조도 강화된다. 연합회에 조합 육성과 교육 기능을 부여하고, 중앙·지방이 공동으로 지역 공공서비스 사업을 기획·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지원도 확대해 자금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도 제고도 병행된다. 조합원과 감사에게 총회 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경영공시 대상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운영 신뢰도를 높인다.

지역 밀착형 역할 확대도 주요 축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특화임대주택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기반 '햇빛소득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조성하는 등 주거·에너지·돌봄·농어촌 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한다.

이 같은 정책은 협동조합의 빠른 외형 성장과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2024년 기준 협동조합은 2만6539개로 2년 전보다 11.1% 증가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전남이 1749개로 전국 네 번째 규모를 기록하며 협동조합 기반이

두드러진다.

농어촌 중심 산업 구조와 맞물려 주거·돌봄·환경·에너지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집중되는 이번 계획의 효과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 공동체 복원의 핵심주체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스타벅스, '패스트 서브' 운영 주문 간소화...편의성 높여

스타벅스 코리아가 6일부터 매장의 피크 시간에 빠르게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패스트 서브' (Fast Serve) 서비스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패스트 서브'는 지난 2024년 2월 시범 도입한 '나우 브루잉' (Now Brewing)을 편의성과 사용성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선보이는 것으로, 주문이 물리는 특정 시간에 대상 음료를 사이렌 오더로 주문 시 더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년간 '나우 브루잉'의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성과와 긍정적인 고객 반응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특징이 보다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패스트 서브'로 명칭을 바꾸고, 고객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서비스를 정규 론칭하며 기존 스타벅스 리워드 그린, 골드 회원에 한정해 제공했던 서비스 대상 범위를 스타벅스 리워드 전체 회원으로 확대했다.

또 별도의 전용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주문 루트도 간소화했다.

일반 사이렌 오더와 동일하게 주문하더라도 대상 품목을 4개 이하로 주문하는 등 조건만 충족한다면 '패스트 서브' 주문으로 자동 전환돼 별도의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자주 찾는 메뉴를 빠르게 주문할 수 있는 '퀵 오더'를 이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는 최근 한전 이트센터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전력그룹사 총출동...513GWh 절감·전력망 확충 병행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가격과 환율 불안이 확대되면서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업계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는 최근 한전 이트센터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국남동 6사를 비롯해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총 10개 전력그룹사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재무위기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과 전력 공급 안정 전략, 전력망 확충 과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국제 연료가격과 환율 급등이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한전은 자체 절감 노력과 함께 대국 단위 자원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차량 2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전자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력용 에너지기세백 확대,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기기 지원, 산업·교육용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원 확대 등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전력그룹사 역시 발전소 내부 전력 사용 절감과 AI 기반 연료비 예측 고도화, 유류부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

회사별 맞춤형 절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 공급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발전사들은 정비 중인 발전기의 조기 재가동과 정비 일정 조정, 고장 예방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기저발전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적기 확충과 '자산 지소' 기반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초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을 즉각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동 자원위기 대응 및 국가적 에너지 절감 선도 공동선언'을 통해 대국민 에너지 절감 캠페인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우체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

신고 활성화 유도...범죄 근절·선량한 가입자 보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갑소속 지능화되고 조직화하는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었다.

기존에 설정돼 있던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없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와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달 중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같은 조치는 고액화되는 보험 범죄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제보 유인을 강화,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성과가 있더라도 상한액(3000만원)에 걸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거액을 편취하는 범죄의 경우, 내부 고발이나 시민의 결정적인 정보 제공이 필수적인데 불구하고 현행 포상금 제도로는 제보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달 중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범죄는 결국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번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공고히 하고,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제주항공, '4·3 할인' 누적 11만명 돌파

제주항공이 제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운영 중인 항공요금 할인 제도가 누적 이용객 11만명을 돌파했다.

제도 도입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항공업계의 대표적인 지역 상생 사례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다.

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2018년 도입된 '제주 4·3 할인' 제도를 통해 올해 3월까지 총 11만2545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존희생자는 561명, 유족은 11만1084명이다.

이 제도는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생존희생자에게 정규운임의 50%, 유족에게는 40%를 연중 상시 할인하는 방식이다. 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른 신분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남대 후원 공동 마케팅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품 돌림판을 돌리고 있는 모습



전남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주최 **광남일보**

후원 **광주광역시북구**